

‘능력’보다 ‘필요’ 장학제도 대안 탐색 중인 대학가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성적 장학금은 축소 저소득층 지원은 확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장학 제도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저소득층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과 중위 소득분위 역차별 및 성적 장학 축소로 인한 학업 성취도 저하는 대립되는 견해의 대표적인 경우다.

필요기반 장학 확대하는 대학가

장학 제도는 학업에 필수적인 환경을 지원하는 ‘필요 기반’의 장학과, 성적 등 학업적 성취를 격려하는 ‘능력 기반’의 장학으로 나뉜다. 한정된 대학 재정 내에서 장학금을 어떤 기준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따라 지원 대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이 어떠한 방향으로 장학 제도를 운영하는가는 구성원들의 큰 관심사였다.

‘장학금은 우수한 성취를 거둔 학생에게 돌아간다’(능력 기반)는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필요 기반 형태의 장학 제도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6년 고려대가 성적 우수 장학금을 폐지한 뒤 이를 저소득층 대상 및 프로그램 기반 장학제도로 개편했고,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는 성적 우수 장학의 비중을 크게 낮춘 바 있다. 서울대는 성적 우수 장학에 맞춤형 장학에 편입하여 학생의 경제적 환경과 학업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고려대가 성적 장학금을 폐지할 당시 총학생회는 논의 절차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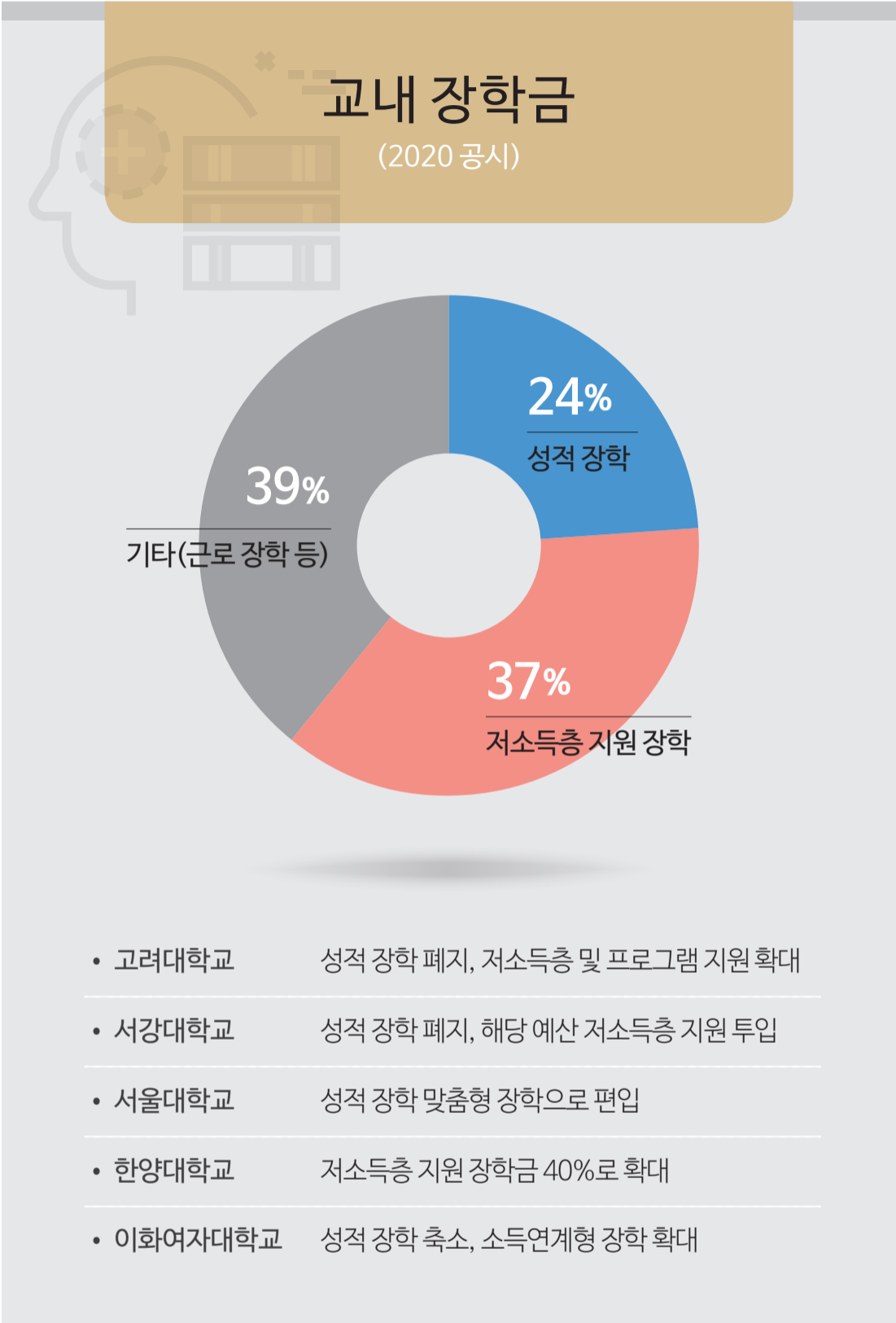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학생들은 높은 비율로 찬성했다.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과스’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2.8%가 성적 장학금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고려대가 필요 기반 장학 확대하는 취지에 학생들도 공감한 결과로 보인다. 고려대는 당시 ‘성취에 대한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학업의지를 가진 학생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이라고 성적 장학의 폐지 취지를 밝혔다.

마찬가지로 서강대는 2017년 성적 우수 장학 축소를 발표했다. 당시 서강대는 “성적 장학금 대상 학생의 약 76%가 9·10분위의 학생들이었다”며 “높은 소득분위의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해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을 제공하려는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허예린 씨도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성적 장학금 폐지 논의가 진행될 때에는 학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며 “하지만 결국 경쟁과 성취에 따른 보상의 의미보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장학의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필요기반 장학, 연구에서도 효과 입증

저소득층 학생들이 성적 장학금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과, 필요 기반 장학의 수혜를 받았을 때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다는 사실은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가 학자금 지원과 대학생의 학업 성취 등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 따르면, 근로 활동을 병행하는 대학생은 학습 시간이 부족하고 낮은 학점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 이는 학자금 대출 등의 제도를 통해서 개선되지 않았다. 반면 학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성적, 대학생활 적응, 교과 참여도 수준이 모두 향상되었음을 밝혔다.



각각 성적 우수 장학과 저소득층 지원 장학의 비중 (대학알리미 2020년 공시)과 성적 우수 장학을 폐지하거나 축소한 대학들

능력 기반 장학금보다 필요 기반 장학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제언을 전하기도 했다.

의약학 계열에 재학 중인 A씨는 “등록금 지원을 일부 받고 있지만, 중간 정도의 소득분위에 속해 남은 등록금과 교재비, 주거비용 등을 혼자 마련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성적 장학에 도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학습 여건이 충분한 고소득층 학생들이나, 혹은 장학 지원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성적 장학과는 다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성적 장학의 폐지가 중위층 소득분위의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와 다르게, 오히려 성적 장학 외의

대안이 없는 현재의 상황이 사각지대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일부 전문가들은 성적과 소득분위 외에 더 다양한 기준을 장학사정에 반영하거나, 등록금 인상 요인 자체를 줄이자는 대안을 내어놓기도 한다. 실제로 MIT는 가족의 수, 재학 중인 자녀의 수, 거주 지역, 부모의 총 소득, 의료비, 자산, 임대료, 가족으로부터 제공되는 재정 등을 반영해 단순한 장학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다.

숙명여대 교육학과 송기창 교수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한 학술

대회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서 성적 기준이 부적절함에 공감한다”면서도 “장학금 확충에만 초점을 두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을 야기하는 요인을 줄이고 국고 지원을 늘리는 등의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분위 별로 지원 형태를 다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지하 연구원은 관련 연구를 통해 “고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 학업 몰두 및 학업 성취 면에서 효과적인 재정 지원 수단이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장학금 지원이 학자금 대출지원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학생지원센터 장학팀 (사진=한진석 기자)